

公正去來委員會

公正去來委員會

1. 總 括

지시사항 건수		완 료	관리종결	추진중		미 착 수	비 고
				정 상	부 진		
총 계	13	11	-	2	-	-	-
단독주관사항	4	3	-	1	-	-	-
공동지시사항	9	8	-	1	-	-	-

2. 指示事項 目錄

○ 完了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완료연월일
6	03-16-01	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	1999. 2. 5
80	03-16-02	공정위의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마련	1999. 5.24
349	03-16-03	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	2000.12.31
48	08-70-03	경제정책관련 대회홍보강화	2000.12.31
164	07-70-15	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	1999.12.31
175	08-70-16	공정한 인사행정	1999.12.20
304	03-70-32	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	2000. 4.18
332	08-70-34	공정한 선거관리	2000. 4.13
276	08-70-27	8.15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	392와통합
282	08-70-29	내년도 과제의 대국민홍보	2000.12.31
366	09-70-39	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내용의 차질없는 실천	2000.12.31

▲ '98-'00년에 완료사항은 「1998-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」 책자 참조 요망

○ 管理終結事項 : 해당사항없음

○ 推進中인 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비 고
425	03-16-06	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	정상
392	03-70-46	4대부문 12대핵심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	정상

3. 推進중인 指示事項

1) 外國企業의 不公正去來行爲에 對應 : 425(03-16-06)

가. 指示內容(2001년 1월 29일,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서)

- 우리기업이 세계경제체제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경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
-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잘 대응해 주기 바람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흑연전극 국제카르텔 조사
 - 2000. 11월 및 2001. 2월 혐의업체를 상대로 관련 자료제출 요구
 - 혐의업체 제출자료 및 국내수요업체들의 수입동향 분석('01. 2 ~ '01. 12.)
 - 문서송달 등 제재를 위한 절차적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('01. 9. 21.)
-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조사
 - 외국경쟁당국(특히 미국)에서 조사완료한 국제 카르텔 사건을 수집하여 국내 피해발생 여부 검토 중
- 국내기업의 역외적용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
 - 미·EU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및 기업결합 사건의 처리 동향과 그 절차에 관한 교육 실시
 - 시기 : 11월 21일 14:00~17:00
 - 강사 : 허선 정책국장, 윤세리 변호사
 - 대상 : 국내업체 관계자 등 70여명

다. 向後推進 計劃

- 흑연전극 국제카르텔 조사
 - 금년 상반기중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조치 등 제재
- 외국기업의 불공정사례 조사
 - 외국 경쟁당국이 조사 완료한 사건중 국내기업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해서는 역외적용 추진여부를 검토

共通 1) 4大部門 12大 核心改革課題의 차질없는 推進 : 392(03-70-46)

가. 指示內容(2000년 10월 4일, 4대 부문 합동보고 회의시)

- 관계부처 장관은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- *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과제
 - ①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
 - ②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준비
- ▲ 추가지시
 - 4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부터는 튼튼한 기반위에 안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(2000년 10월 23일, 제43회 국무회의시)
 - 관계장관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을 갖고 직접 나서 개혁과제 완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(2000년 10월 31일, 제44회 국무회의시)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확장 및 왜곡된 지배구조를 시정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시행(2001년 4월 1일)
 - 2001.4.1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당해회사 순자산의 25%를 초과한 국내 타회사 출자를 금지하고 출자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2002.3월말까지 해소시킨 부여
-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기업경영여건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
 -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등 4개 사항에 대한 예외인정 확대(시행령 개정, 2001. 7. 24)
 -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 허용 및 지배력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한 예외를 확대, 기존 출자한도 초과의 해소부담 경감을 위해 해소 시한내 미해소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만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(공정거래법 개정, 2001. 12. 21)
- 출자현황 점검 및 이행 독려
 -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 출자현황 점검(2001.4~6) 및 단계별 해소계획을 징구하고 분기별 해소실적을 점검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선단식 경영행태 및 소유·지배구조 왜곡을 개선
 -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사항이 내년 4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

※ “8·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(276-08-70-27)”은 동지시사항에 통합관리중

